

제36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6월25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 동력선 사건 등 외교 안보 관련 현안 보고

상정된 안건

1. 북한 동력선 사건 등 외교 안보 관련 현안 보고 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당시 참전한 용사들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잠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착석)

현안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이해서 국가안보와 외교안보의 중차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현안은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파를 초월해서 대

한민국의 힘과 지혜를 모으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이 위임하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개의를 했습니다. 북한 동력선 사건과 여러 기타 안보현안들을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동력선 사건 등 외교 안보 관련 현안 보고 (10시05분)

○위원장 윤상현 의사일정 제1항 북한 동력선 사건 등 외교 안보 관련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후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전체 회의 이후 오늘까지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외교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사카 G20 정상회의와 이 계기에 열리는 한중·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국들과의 외교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외교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영 신임 제1차관입니다.

이태호 제2차관입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유대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어서 올해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복 신임 공공외교대사입니다.

임기모 신임 의전장입니다.

김정한 신임 아시아태평양국장입니다.

강상욱 신임 동북아시아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나머지 간부소개는 배포해 드린 참석간부 명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북핵문제 관련 현 상황 평가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 부재 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북미정상 간 친서 교환 그리고 고 이희호 여사님 유가족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 전달 등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진핑 중국 주석 방북 계기 북·중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의 북미대화 의지가 재차 확인되었으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는 G20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대화 프로세스 재개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련의 긍정적 움직임들이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금주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비롯하여 각급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공고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이들 국가

들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 계기 여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공고화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헝가리 선박 침몰사고 수습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의 충돌로 침몰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우리 국민, 탑승객 33명 현황은 생존 7명, 사망 7명, 실종 19명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5월 30일 외교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가동하는 한편 부다페스트 현지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급파하여 현재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인 5월 31일 헝가리 외교장관과 내무장관을 만나 사고수습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6월 11일 선체를 인양하였으며 이후에도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여 현재까지 총 16구의 시신을 추가 수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지에서 피해자와 가족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돕고 현지 장례와 시신 유골의 국내 운구, 반입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가족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장례절차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헝가리의 사법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책임규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여러 경로와 계기를 통해 헝가리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실종자 수색,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중관계 동향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중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무역·기술 분야를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심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미중 양국 간 상황 전개와 여타국들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 범정부 협업과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통합적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외교부 내에도 간부급 회의를 구성하고 지원반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당한 4강 협력외교라는 국정 목표하에 미중 양국과 고위급에서 전략적 협의를 체계화, 제도화해 나가는 한편 중견국과의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공외교와 대국민 설명을 통해서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후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통일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식견을 토대로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 차관입니다.

이주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태현 정세분석국장입니다.

서정배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정승훈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이승신 정책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양국은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경제·민생 분야 협력과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과는 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국면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친서외교를 통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측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근본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소극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경제성장을 독려하고 있으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의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는 북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쪽, 북한 선박 및 선원 관련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6월 15일 아침 7시 10분경 해경 상황 보고를 통해 최초로 관련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처리 절차 및 관계기관 간 업무분장에 따라 귀환을 원하는 북한 선원들의 대북 송환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17일 오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선원 송환 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하였고 북측이 이에 호응하여 6월 18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을 인계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송환 당일 오전에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설명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상황을 적시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입니다.

북한은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원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현재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6월 21일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를 7년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금번 5만t 지원 결과 등을 보면서 추가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엔아동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에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여 민간 차원의 인도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6월 1일에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 대통령 특사로 다녀왔는데 그때 그쪽의 부켈레 대통령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하나는 '지금 중남미와 한국의 FTA가 빨리 비준이 되면 양국의 경제교류에 큰 도움이 되겠다', 또 하나는 한국이 경제강국에서 문화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따로 인터뷰 할 때. 그래서 청와대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외교부에서도 알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 아세안포럼 대표를 맡아서 몇몇 분과 함께 아세안 본부가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쪽

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가전제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동차도 길거리에 참 드물어요. 현대차 공장은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부지선정 중인 것 같아요. 신남방 정책을 우리가 천명하고 있는데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넓히기 위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정부가 잘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의원외교 또 특사활동을 하시고 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신남방의 핵심 파트너국입니다. 우리가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도와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미 미리 진출한 그런 다른 나라 기업들의 활동이 또 왕성한 게 사실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 정부, 다시 재선 되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긴밀한 그런 우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더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편지 받았다고 좋아하고 자랑을 하는데 마치 남녀 간의 무슨 연애편지처럼 자랑은 하면서도 내용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장관께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고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간에는 이러한 북핵 또 북한 관여와 관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친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브리핑을 받았습시다만 미 측이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우리가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이석현 위원** 변죽만 울리는 것 같아요. 변죽만 울리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톤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정상외교의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석현 위원** 북미회담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하여튼 양측이 다 대화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정상의 의지가 분명한 것은 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현 위원** 이도훈 본부장, 혹시 누가 마이크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말씀으로 크게 하면 되겠어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예.

○**이석현 위원** 이번에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가서 또 비건 대표뿐만 아니라 많이 만나보셨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DMZ 방문해서 평화 메시지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외신에도 나고 국내에도 많이 나고 그래요. 또 어떠한 분은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간절한 희망이 그러한 상상으로 나타난 것이겠지만 최소한 북한에 대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트럼프가 접경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그런 정도는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대화를 시작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계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미측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결정은 없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이?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오늘 아침도 외신에는 마치 DMZ 가서 평화 메시지 발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양 대세로 지금 언론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예,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통일부장관께, 어떻게 시간이 1

분밖에 안 남았을까?

통일부장관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번에 목선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과거에 북한 정규군이 노크 귀순한 것하고 이번에 4인승 민간 조각배 어선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야당에서 비교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를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 않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특히 그 목선을 폐기했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폐기 안 했다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매뉴얼이구요. 저희들이 선원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그 선박을 송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와 관련돼서……

○**위원장 윤상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정확하게는 ‘선장의 동의하에 선박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대변인의 정확한……

○**이석현 위원** 취지가 잘못 보도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못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은 저희들도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4명 중 2명이 귀환했고 2명은 우리한테 귀순한 거지요?

그걸 더러 걱정하시는 분들은 왜 3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돌려보내느냐 이러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억류했다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떠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남을 사람 남고 보낼 사람 보낸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통일부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송환만 담당이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방부 또 안보실과 상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유사한 사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송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2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통일부장관, 북한의 김정은이 ‘조선이 침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발언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대통령께서도 어제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6월 16일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우리 반만년 역사 동안에 우리 남과 북은—지금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그 어떤 나라도 침략을 한 적이 없다, 총부리를 겨누는 역사만 있을 뿐이고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6·25 전쟁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한반도 내부와 한반도 바깥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총부리만 겨눴다고 그랬고 서로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굳이 강조를 했어요. 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말하자면 북침에 대한 방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김정은 발언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안 합니까?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북침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남침은 역사적 사실이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그렇게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시고, 마치 6·25 전쟁을 부정하는 것처럼 전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정은도 지금 북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상세하게 메모해서 지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일본이 거절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한일 간에 현안이 많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은 사이드라인 외교를 하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아베가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게 어렵다고 했지 공식적인 거절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담 희망 의향을 전달을 했고 그것이 G20을……

○**이정현 위원** 희망을 청와대도 했고 외교부도 했고 한일 현안이 많다고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아베 수상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절당한지 안 당한지도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고 한미 외교나 한중 외교나 한일 외교, 최근에 지금 우리 한국이 대단히 고립되고 또 외국으로부터 가까운 나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외교 라인이 무너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한일 회담이 이렇게 거절당한 것은 하나의 외교 참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한국 외교사에 바로 이 점은 굉장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 이게 거절로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회담이 열려서 양국 간 많은 현안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지만 G20 주최하는 일본 측에서는 또 일본 측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하다는 그런 국민 심정도 장관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외교 참사고 외교 오점입니다.

이번에 또 외교부에서는 한일 기업과 관련해서

‘양쪽 한일 기업이 출연을 해서 징용 피해를 배상을 하자’ 정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의견을 들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 사안……

○**이정현 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히…… 피해자들 의견 들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이정현 위원** 그러면 피해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피해자들의 의견은 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표현이 되었고, 그 결과에……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도 안 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의견도 듣지도 안 했고, 외교부가 그동안에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고 동의도 듣지 않았고 국민들의 정서도 무시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똑같은 경우고, 오히려 그때 외교는 그래도 정부 돈을 받아서 기금이라도 했는데 이제 기업에다가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돈이 핵심입니까? 돈이 쟁점의 핵심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사법부 절차의 마지막 판에는 결국 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한……

○**이정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돈이 핵심이냐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위안부 합의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든 이번에 그러면 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강제징용 문제는 지금 우리 최고의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내린 그 결과를 정부가 존중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제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사를 한번 떠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사전에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에서 거절을 했는데 이걸 발표를 했고,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국민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 입장에서 무시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전에 일본에 제안을 했고 일본에서 거절을 했는데, 한 시간 만에 무시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외교 참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절차적으로는 저희도 일본 측에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본에 관한 외교는 딱 한마디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무관심하고 있다가 무대책을 하고 있다, 방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북한 주민 송환 보내는 데 두 시간 만에 돌려보냈지요, 그렇지요? 무려 거의 6일 정도를 NLL을 넘고 또 계속해서 같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두 사람을 두 시간 심문하고 돌려보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통일부에서 내놓은 자료로 그전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어쩔 때는 11일, 어쩔 때는 2일, 어쩔 때는 10일, 1일, 8일, 8일, 7일, 6일, 4일, 4일, 7일, 6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많은 심문을 하고 조사를 한 끝에 정말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냈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말하자면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이렇게 따져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6월 21일 7명, 2017년도 6월 22일 8명의 경우에는 언론에 한 줄도 난 적도 없습니다.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시간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있었던 이것 말고, 이번에 왔었던 정박 귀순 말고 또 다른 귀순, 또 다른

넘어왔을 때 그 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조사를 안 하고 돌려보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김연철** 해상에서 돌려보내는 사례는 대체로 NLL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경이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체로 지금까지 송환의 사례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이번에 두 시간 만에 돌려보낸 이유, 말하자면 어떤 조사를 거친 뒤에 보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는 합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시간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합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않고요. 대북 조치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순서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국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장관이 보시기에 이제 북·미 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분위기가 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혜영 위원** 친서 교환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친서에 표명이 된 정상의

대화 의지, 신뢰 표명 이런 것이 있지만 정상 차원의 그런 또 다른 만남·합의로 가기까지는 실무협상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북구를 순방하면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무협상이 있어야만 정상 간의 합의 도출로 나아가는 그런 기초가 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렇다면 30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에서 비건 대표가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 측으로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도 이번에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계속 발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미 간의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미 측이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측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있었다 하는 것은 브리핑받은 바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할 때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이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것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지금 1박 2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제약을 생각했을 때, 물론 뭐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중요한 일정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원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까지 한미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또 그것은 작년의 남북정상회담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가능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물리적으로도 지금 압박해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친서 교환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북·미 간 접점이 일정 정도 좁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계속해서 좁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정부 대응,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서 오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드리고, 내용이 길어서 본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에 큰 변수와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처럼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야말로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도무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관세, 시장 가격, 수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영향 이런 경제적 측면에 대한 답변만 제가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외교부 전체의 관점이 녹여진 답변이 아니라 외교부의, 국내의, 그것도 북미유럽경제외교과의 과 수준의, 과 범위의 답변을 국회의원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우리 정부 부처의 문제점이고 외교부만의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국가 단위의 대응이 필요한, 그러니까 부처 단위의 대응이 필요한 게 있고 또 특히 중국 문제는, 미·중 무역과 기술 분쟁의 문제는 범부처 간의 대응이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면, 그게 없다면 이상한 건데 우리 외교부의 경우에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달이 넘도록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 종합적인 입장 검토가 포함된 입장을 요구했는데 못 받아 보고 그나마 오늘 장관께서 보고한 내용이 가장 종합적인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미·중 무역분쟁이 1년이 지난 이래 처음으로 종합적인 관점이 녹여진 보고서를 제가

받아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부처 간 칸막이의 심각성은 다 얘기합니다만 나는 외교부 내부, 통일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 내부의 부서 간 칸막이는 과연 제대로 녹여져 있는가, 정말 정보와 판단이 공유되고 교환되고 그걸 통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장관께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부터 통합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이번의 계기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것이 조직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마침 그러한 통합적인 조직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원혜영 위원 예, 그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래서 외교부 내의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민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에 대해서 대북 쌀 지원 관련해서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분 더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상현 예,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이번 지원이 9년 만에 지원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늦었지만 환영을 합니다.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시뮬거리로 삼는 것은 참 우리의 품격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쌀 5만t 지원이 민간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거의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리고 이 쌀이 대한민국이라고 표시된 포장지의 포장으로 되어 있고 도정된 쌀로 지원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랬을 경우 이런 것의 기대하는 효과나 문제,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일단은 국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비축미이기 때문

에, 유통되는 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쌀 지원을 아홉 차례 했지만 아홉 차례 모두 국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벼 상태에서 쌀로 도정해서 줍니다. 도정된 쌀은 하절기에는 3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보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통일부장관님, 오늘이 6·25 전쟁 발발일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국군의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되지요? 아세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

○유기준 위원 잘 모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6·25 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남침입니다.

○유기준 위원 오늘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가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한국의 정체성을 지켜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스웨덴 방문을 마치고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남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이게 16일입니다. SNS에다가 ‘남북은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 아니에요? 이것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무슨 나라와 나라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를 떠나서 ‘침략을 한 적이 있다, 없다’ 거기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북이 침략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스웨덴에서 말할 때는 ‘남북이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남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목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니다.

이게 지금 귀순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어로 작업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이 합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유기준 위원 어떤 결과를 통보받았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2명은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2명은 남겠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보면 준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당장 엔진이 달려 있는 선박에다가 그 안에 식량도 있고 식수도 넣어 놔고 이러면, 물론 어로 작업을 일시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처음부터 귀순 목적을 가지고 왔을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사람을, 4명 중에 2명을 심문도 아주 간단하게 시간만 채워 가지고 한 2시간인가 하고 며칠 있다가 보냈습니다마는 그렇게 2명은 남고 2명은 보내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기준 위원 나중에 이것 조사를 해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통일부장관 책임을 지겠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런 사례 적지 않습니다. 4명 왔는데 2명……

○유기준 위원 왔을 때, 보세요. 귀순을 목적으로 왔다면 처음부터 4명이 짝을 지어서 그렇게 안 오지요. 아예 자기들이 귀순 목적이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2명은 처음부터 남고 2명만 오지 어떻게, 그러면 오면서 의사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상적으로 3명이 오거나 4명이 왔을 때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1명 아니면 2명 이런 사례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유기준 위원 선박포기동의서를 쓴 사람은 누구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선장의 동의입니다.

○유기준 위원 선장은 여기 남았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선박포기동의서를 받아서 선박을 폐기했다’ 이렇게 처음에 발표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저희들이……

○유기준 위원 지금 이 선박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아마……

○**유기준 위원** 폐기됐습니까, 보관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원래 매뉴얼에 따르면 선장의 동의를 받으면 폐기의 과정을 밟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폐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나중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 폐기하면 안 됩니다. 증거물인데 그걸 보존을 해야지 폐기한다면 말이 성립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다음 대북 쌀 지원, 이게 지금 양이 얼마나 되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5만t입니다.

○**유기준 위원** 5만t이면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한 1300억 원, 수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돈이 되고 80kg 쌀 한 가마니 기준으로 하면 62만 5000가마니가 되고, 요즘 시장에서 파는 것은 20kg으로 팔지요? 그러면 그게 대략 한 250만 개에 달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결식아동들 33만에게 나눠 주면 7포대 이상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보세요. 2017년도에도 북한에 식량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에도. 그런데 그때는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 싱가포르회담을 언제 했지요? 그때는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 가지고 노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게 800만 달러 지원을, 이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실지 송금은 최근 한 2~3주 전에 이루어졌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유기준 위원** 자, 그다음에 또 쌀 5만t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이게 오비이락이 아니고 노딜 때문에 앞으로 북한을 미끼로 해서 설득하겠다는 설득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인 원칙에 따라서……

○**유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왜 이 시점에 하느냐고. 인도적 지원이, 북한이 쌀 사정이 나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그러면 왜 안 했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최근에 WFP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또 WFP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응한 것으로……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정부도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주 28일, 29일 오사카에서 G20 회담 하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맞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통상 개최국인 일본과는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순리이고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은 ‘한일정상회담은 보류하고 만약에 한다면 서서 하는 스탠딩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일본 가서 우리가 일본의 분위기를 확인했더니 너무나 안 좋아 가지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 책임을 느끼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 과제가 안 풀린 데 대해서는 물론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G20 계기에 우리 정상께서 주최국과 정상회담을 꼭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G20을 보면 한 반쯤은 하셨고 또 반쯤은 안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대법원에서 했던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그것이 좀 있으면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배당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곧 아마 실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절차에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압류 및 환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마 8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일이 발생하고 ‘다시는 한국과는 이런 대화는 물론 일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 또 그에 대한 보복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보복성의 대응조치가 나온다 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외교당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대응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기준 위원** 그게 대응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 침략에 맞서 싸웠던 우리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과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전쟁은 너무나 뼈아픈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북한의 침략으로 우리 군인과 또 민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국군 측에서도 보도연맹이라는 이유로, 좌익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이겨내야 될 시점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톡홀름 연설에서 ‘남북 간에 서로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현행 우리 법상으로 북한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이중적 존재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국제법상으로 국가로 되지만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황교안 당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책으로 서술할 정도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가 적용했던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불법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 황교안 대표가 왜 국가 간의 관계로 남북관계를 오인한 것인지, 이런 불필요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송영길 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번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저희가 WFP에 800만 불 유니세프랑 지급을 했지요? 5만t 쌀 지원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송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은 동의할 겁니다마는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나 중립적인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임산부들 이런 취약계층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이냐 이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이에 대한 모니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받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저희들이 WFP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WFP가 현재 북한의 영양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평양에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 앞으로 5만t 지원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오케이, 잘 체크를 해 주셔서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경화 장관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사이버 보복공격을 지시했습니다. 바로 미사일 공격을 하기 10분 전에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는 한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란 핵 합의가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라는 이 공동계획이 2017년도에 합의가 되었지요, P5+1으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제가 최근에 프랑스대사, 영국대사, 독일대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봐도 유

럽연합은 이 핵 합의를 준수한다……

그리고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피어(Fear)라는 책 보셨습니까, 강경화 장관님? 못 보셨지요, 바빠서? 피어라는 책, 분노라는 그 책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것 못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요약본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다. 거기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핵 합의를 취소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아니, 지금 국제기구 모두가 판단해 보니까 어찌 되었건 형식상으로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고 있는데 무슨 핑계로 이것을 철수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틸러슨이 해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니, 프랑스대사도 저한테 하는 말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과 이란이, 다 해서 7개 나라가 합의한 이 합의를 대통령 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무시를 해 버리면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서 핵 포기를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의 그런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공개적으로 았더라도 저는 미 폼페이오 장관한테도 분명히 이런 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대통령이 바뀐다고 미국이…… 미국을 대표했던 오바마 대통령, 케리 장관이 합의 사인한 것을 무시해 버리면 만약에 지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말을 믿고 사인을 했는데 핵을 다 포기했는데 다음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트럼프가 합의한 것은 다 무효다’ 해 버리면 무엇을 믿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여러 가지 합의가 있겠습니까마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인 북핵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 핵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JCPOA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위원** 글썬요, 그 완전한 해결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장관님이 스탠스(stance)를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김정은은 임기가 없는 상황인데…… 아니, 우리가 상법에서도 전임 대표이사가 사인한 것은 후임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 사인한 것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방위비 재협상, 지금 이 문제는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 측의 내부 검토가 아직……

○**송영길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20 갔다가 우리나라 오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송영길 위원** 오시면 여기 평택 미군기지 방문할 계획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길 위원** 평택 미군기지 방문할 계획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세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마는……

○**송영길 위원** 저는 평택 미군기지를 꼭 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444만 평의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방위비 협상에 대한 오해를 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다녀가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암체어 워리어’라는 얘기 아시지요, 우리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송영길 위원** 안락의자의 전사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군대 안 가고 아들도 군대 안 보낸 사람들이 가장 대북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강경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문제인 대통령은 공수특전부대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에 섰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담마진을 이유로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고 대한민국 안보가 없어졌으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는 그런 뼈아픈 전쟁의 경험을 다 담아서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일부장관, 북한의 지난번 선박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제쳐 두고 통일부가 18일 날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선박과 관련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국방부는 동해 해군 1함대에 보관되어 있다 했는데, 이렇게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이 대북조치를 할 때 대체로 선박과 선원에 관련되어서 대북조치를 할 때는 선박을 같이 보낼 것이냐 선원만 보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다시 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 매뉴얼이 있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대체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실래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우리 장관님 군대 갔다 오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갔다 왔습니다.

○강석호 위원 몇 년도 다녀 오셨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87년입니다.

○강석호 위원 저도 병장 출신인데 줄병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를 못 한다’ 우리 중대장, 대장이 저희가 작전훈련을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충성심과 군 기강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으로서 이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얘기드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문서답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곤란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지요.

우리 강경화 장관님은 군대는 안 갔다 오셨습니까마는 일반적으로 외교안보를 맡고 계신 수장이시니까 이 얘기에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태세에서는 한 치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 기강이 많이 망가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선박을 왜 폐기를 하려고 또 폐기가 안 된 것을 왜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이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까 합심반에는 우리 통일부가 들어가지를 앓고 기무사, 경찰, 국정원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은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합동정보조사팀에 이렇게 보면 정보수집을 위해서는—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절대로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배 안의 엔진과 남아 있는 연료 등을 통해서 남하한 해상 루트를 파악하는데, GPS랑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급해 가지고 오자마자 이것을 그다음 날 폐기를 한다고 통일부가 왜 그런 브리핑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선원을 돌려보낼 때 배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석호 위원 정밀조사를 해야지요. 그렇잖아

요?

옛날에 우리 후포에서 동진호가 북방경계선을 넘어 가지고 조업을 해서 러시아에 한 달 보름인가 억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는, 다른 것은 제쳐 두더라도 이틀 후에 2명을 돌려보냈다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배조차 이렇게 통일부가 나서서 폐기했다 이런 거짓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가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호 위원** 이것 누구의 지시입니까? 장관의 지시였어요 아니면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변인이 마음대로 브리핑 못 할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이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1함대 사령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그러면 장관한테 결재도 안 받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브리핑합니까?

그 의도가 뭐냐 이거야, 의도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이것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납득을 못 하겠어. 우리 장관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를 한번 설득을 시켜 보세요, 어떤 매뉴얼에서 어떻게 이런 폐기 이 부분이 나왔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 선원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송환을 할 때 선원과 배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한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봤을 때 그게 배가 너무 낡았고 선장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폐기 절차를 밟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북 조치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강석호 위원** 그것은 그러면 통일부 혼자서 결정합니까? 이것은 국방부·국정원 다 관련된 기관들이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데 왜 통일부가…… 그 기관들이 합의했어요, 그러면?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은 결정된 것……

○**강석호 위원** 합의했느냐고.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 결정된 것을, 대북 조치를 맡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서 타 기관과 합의를 했다 했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당연히 부처 간에 합의를 합니다.

○**강석호 위원** 합의를 했는데 왜 해군 1함대에 보관되어 있어요, 폐기되었다 했는데?

○**통일부장관 김연철**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매뉴얼을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폐기를 한다 하면 아까 얘기대로 타 관계부처들과 합의 하에 폐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왜 통일부가 마음대로 혼자서 폐기되었다고 브리핑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정례 브리핑에…… 이런 내용을 브리핑할 때도 관계기관들하고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당연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게 무슨 매뉴얼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통일부장관 김연철**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매뉴얼에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합의 없이 이런 것을 그냥 통일부 매뉴얼대로 막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매뉴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석호 위원** 그러면 이것 1함대에 보관 중인 그 북한 어선도 통일부에서 국정원하고 국방부하고 다 합의해서 그러면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

○**강석호 위원** 참 답답한 장관님이시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6·25 69주년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하고요.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역사로 바뀌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우선 사실 확인, 팩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통일부에서 발표를 할 때 선박 폐기와 관련해서 선장의 동의를, 포기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박을 폐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폐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선원을 송환할 때 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배를 왜 돌려보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배가 낡았고 선장의 동의에 따라서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선박 폐기 여부가 이 사건과 문제의 핵심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는 폐기하지 말고 일단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는 어선에 의해서 경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군 기강의 해이에 관해서 우리 군은 심각한 자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순 과정에 관해서 자꾸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에 입각해서 솔직히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은폐의 의혹에서 또는 축소 의혹에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명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귀순의 문제에 있어서 ‘왜 빨리 보냈느냐, 3일 만에 보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대개 이틀에서 5일 사이에 보냈어요. 특히 15년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따라서 왜 3일 만에 돌려보냈느냐

나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의사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남겠다고 사람은 남는 것이고 가겠다고 사람은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병석 위원** 누구는 귀순을 받아주고 누구는 송환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개인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또 여기에 관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군의 경비태세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이런 문제에 관해서 NSC에서 깊이 논의하시고 지금 귀순의 문제에 관해서 논란됐던 사항과 관련해서 기존 매뉴얼을 다시 고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NSC를 통해서 외교·안보팀 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매뉴얼을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병석 위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금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북한 간의 최고위급에서의 소통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데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이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분이 주도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지 그것이 다시 다자간의 관계로 확산되면서 더 복잡한 방정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양자간의 관계는 물론 다자 외교에도 우리 외교부가 전력질주를 해야 된다는 제 의견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하신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자의 틀, 양자를 넘어서 다자의 틀도 분명 어느 순간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양자 그리고 특히 북·미간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거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북·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의 여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 정보의 공유, 협상 과정에서의 상호 논의 이런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장관께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병석 위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는 저는 두 가지 점을 항상 고려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는 두 가지에 달렸다…… 첫째는 북·미간의 관계, 두 번째는 미중간의 관계가 동시에 해결돼야만 가능하다 그런 것이었고, 북한을 먼저 가느냐 한국을 먼저 가느냐의 문제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북한을 먼저 가게 돼 있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장벽을 넘어서 일단 시 주석께서 북한을 방문하셨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시 주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 개선·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깊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병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미간의 접촉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소외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중국, 러시아 또 일본과 북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정양석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당사자가 앞에 계셔서 송구합니다만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어떻게 보면 장관 임명 후에 첫 상임위 회의 자리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적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야당에 대해서 임명 후에 또 오늘 회의까지 어떤 양해나 절차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길게 흘렀고 또 사안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청문회이고 오늘 회의는 회의, 현안보고는 현안보고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좀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일을 따지 걸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사 간 혹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주재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정리하시는 것이 앞으로 있을 청문회 문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위원장님 유념해 주시고…… 굉장히 그것은 또 유감스럽습니다. 여야 간에 청문회할 때 흥분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오늘 상임위 개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상화 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협의안에 대해서 인준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교·통일 둘 다 현안이 막중

합니다. 늘 열려야 되는 상임위이지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열렸습니다. 과연 외교·통일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한국당 간사도 부재중인 가운데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 정상화의 페이스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언제부터가 늘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두 분이 같이 오시는데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일부 외교부 따로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좀 늦게 와서 이 시간에……

○정진석 위원 분리하는 게 정상이지.

○정양석 위원 그래서 향후 의사일정 협의에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해서 송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통일부장관님께서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점을 감안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통일부장관님,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지요?

보니까 선배 장관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선배 장관들은 ‘축사만 하고 다닌다’ 혹은 ‘통일부가 감을 못 잡는다’ 그러지 또 야당 한국당에서는 서로 접촉도 없지 어려움이 참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축사하고 다니는 게 축사가 아니고 내 나름대로 소통이다. 그래서 기조연설이나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그러는데 한국당과는 소통을 별로 안 하시네요. 청문회 과정에서는 자주 오시겠다고 하시던데 안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나 준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날 축사한 것은 김재경 위원님이 주최한 세미나였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민과 소통한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축사가 소통입니까? 자기만 하고 가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다, 장관 오시더니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북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신 것 봤습니다. 김연철 장관으로서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임 장관이 합리적이었다고 소문이 나고 야당의원과 소맥도 마셨다고 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청와대와 뜻이 맞지 않아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 시간 넘게 전화로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더니 결국은 옷을 벗더라…… 그래서 그런지 장관께서는 선배 장관들의 이런 쓴소리에 영여지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량 지원하신다면 여론 수렴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혹시 와서 설명하러나. 그런데 민화협, 북민협, 종교인평화회의 그다음에 천주교 대주교 그다음에 불교 스님 만나시고 결정하셨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장관님 스타일의 의견수렴이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청문회 과정에 그런 양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찾아와서 설명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또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쌀 5만t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쌀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쌀값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 아직 의결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마저 국회가 심사권을 가진, 또 국회가 만들어 준 협력기금을 집행하면서 장관은 장관 식이에요, 먼저 발표하고 의결은 나중에 한다.

결국은 이 기구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경시도 들어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관행처럼 해 왔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고쳐 나가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외교부장관, 이제 한 2년 지났다고 장관님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마음고생이 참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외교부가 내놓은 소위 민간

기업들의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좋은 방안이었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나 또 전달방법으로나 이게 좀 맞지 않았다. 또 일본은 많이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바로 거부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그런데 장관이 주도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일관계 관리에 있어서는 물론 외교부가 일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 마련은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범정부적.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현안이 많이 돼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 문제는 외교부나 이 정권만의 독점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된 외교 문제 고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오죽하면 야당 위원들이 일본 국회를 또 방문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만……

지금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이 참 궁하다. 이게 한일청구권 협정에 분쟁이 생기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거나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3국 정부가 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우리가 볼 때 일본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여론 주도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측 대응이 타이밍이 늦고 또 메시지도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 안이 일본에 의해서 받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 측의 입장은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우리에게 대한, 3조 1항에 대한 협의요청이라든가 또 중재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판결의 이행이 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그 배상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소송 당사자 간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입장을……

○정양석 위원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논리가 나는 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무슨 해법이 있을까 싶어서 많은 전문가들, 위성락 대사, 이원덕 교수, 남기정 교수, 신각수 차관 그분들이 내놓은 각종 아이디어들을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 안을 내놨습니다. 좀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 간의 문제

가 외교부만의 독점이 아닐 때에는 광범위하게 국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화 장관님은, 저는 기억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위안부 배지를 달고 청문회에 오신 분입니다. 당시 외교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던 메시지였고 그리고 장관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 취임 이후부터 또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우리 한일관계가 과거의 합의를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지금 갔던, 또 지금 한일의 파행의 한 원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강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보도 있는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는 강 장관께서 임기의 마지막으로 이 일본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국민들의 또 국회 야당, 여당의 의견 수렴해서 잘 풀어 주고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장관으로서는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하고 강제징용 판결은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합의는 구두의 정치적인 합의였고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의 최고재판소의 확정판결이 내린 부분을 행정부로서는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근본적인 맥락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양석 위원 장관은 외교부장관입니다. 원인이 어찌 됐든, 원인은 달랐지만 이것이 한일 외교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충분히 직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설명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맥락이 굉장히 복잡하고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교부로서는 또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책임감은 막중하다고 매일매일 느끼고 문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없지요, 지금. 지금 한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시한폭탄이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거의 치킨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게임.

그런데 오늘 장관 답변을 들으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유기준 위원과 일문일답 하면서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이거 내일 아침에 신문 제목거리라고 보는데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전쟁이든 외교전쟁이든. 장관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신문 1면 톱 제목거리예요.

외교부장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일본은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만일 이게 법원에서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내 관련한 주식 매각이 실제 집행이 되면,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보복조치를 할 거예요, 일본이. 일본의 보복조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보복조치 한다…… 그러면 피해는 일본과 한국 중에 누가 더 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이?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대응·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도 대응·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뒤에서 계속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나는 외교부의 이 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태도, 관리 태도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일 기업 강제징용 기금조성안을 불쑥 발표했다가 바로 당일 날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했지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봐요. 이게 무슨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슈라고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이런 걸 발표할 때는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 발표되는 것이지요.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거의 시한폭탄을 갖고 노는 그런 식입니다.

아니, 그리고 며칠 있으면 개최되는 오사카에서의 G20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개최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못 잡은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자회의에서 모든 정상회담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르잖아요. 오사카,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좀 다른 겁니다. 한일 양국 간의 중대한 현안이 지금 가로놓여 있고 바로 이웃 국가고 말이지요.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안 잡힌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되는 거고 사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외교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다자회의에서 모든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장관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도대체……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진석 위원** 장관의 인식과 자세가 아주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 이 말씀 유효합니까? 장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만큼 상호 상황 악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본 외교당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오로지 치킨게임, 마주 오는 기차의 상황 이외에는 전혀 다른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3월 20일자 제 페이스북, SNS에 미국과 중국의 화웨이 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튈 수 있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아무도, 제 페이스북 글이 주목받지 않다가 이거 지금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잖아요. 화웨이를 미국은 쓰지 말라 그러고 중국은 안 쓰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고…… 약한 우리

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동맹을 선택하느냐, 시장을 선택하느냐 고민을 하게 됐는데……

당장 지금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안 할까요?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의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질 문제, 자꾸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지 말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기들이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5G에 관해서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고 또 중국 측의 입장이 있고 양측의 입장을 저희가 잘……

○정진석 위원 우리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간 기업체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되 5G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고 또……

○정진석 위원 그만.

주한미국대사가 지금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 통신장비 계속 쓸 경우에 정보공유 안 하겠다’ ‘민감한 정보 안 주겠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민감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정보공유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5G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G와 관련해서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 장비를 쓰고 있는 기업들과 긴밀히 논의를 하면서 보안……

○정진석 위원 답변 안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통일부장관, 북한 목선 관해서 장관 주제로 회의한 적 있어요? 장관 주제로 회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별도로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 통일부장관 주제로 북한

목선 관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강연 다니느라 바빠서?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 매주 간부회의 할 때 그 주제도 하나입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 이런 긴급한 상황이 나오는데 통일부장관이 별도 회의를 주제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건 발발 직후에 긴급한 이 현안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 회의만 갖고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잘 납득이 안 가요. 강연 좀 줄이세요, 강연. 강연 좀 줄이시라고.

1분만.

○위원장 윤상현 예.

○정진석 위원 4월 8일 취임한 이래 6월 20일까지 73일 동안 축사, 기조연설 다닌 게 21회예요, 21회. 이러니까 정양석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질문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북핵 문제 얘기하는데 만일에 제3차 북미회담이, 미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난번 하노이처럼 가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바텀업으로 가야지 톱다운 절대 안 된다 말이야.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정진석 위원 그래서 바텀업 방식의 대안들이 막 논의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한미전략포럼이라는 게 얼마 전에 있었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 나와요. ‘빅딜 속 스몰딜’ 그거 들어 봤지요?

빅딜 속 스몰딜, 빅딜이라는 것은 일괄 타결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큰 결론은 협상에서 해 놓고 그 첫 단추로 영변 플러스알파하고 일부 제재 풀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걸 좀 병행하자는 얘기인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무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정진석 위원 알았어요.

묻는 내가 바보다.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이런 회의는 뭐하러 해? 이런 회의를, 외교통일을 왜 열어?

두 장관 답변하는 것 보세요. 주의 좀 주세요, 위원장이 좀.

○위원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위원이 말이야 본질 문제를 물어도 하나도 대답도 안 하고 빙빙 돌다가 시간만……

아니, 그러면 복귀해서…… 이렇게 하려면 일어나세요, 그러면.

○추미애 위원 회의 좀 합시다.

○정진석 위원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고 장관들이……

○추미애 위원 아니, 정진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줘야 되는 거지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정진석 위원 아니,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윤상현 두 분 장관님께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내용을 갖고 답변을 해야지 말이야.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회의 진행하실 때, 국민이 다 보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가운데 다소 장관에 대해서 호칭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교육에도 좋지 않아요.

○위원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제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가 아주 민망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합법적인 식민지로, 중국

을 점령지로 보기 때문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주 잘못된 인식이지요.

‘조선인 강제 노동자는 38년에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동력의 동원이다. 그래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38년의 국가총동원법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악법 중에도 악법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절대 근거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 측의 그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중국인 강제 노동자는 강제로 일본에 끌려 왔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달리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과거사는 정의 또 원칙에 맞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법 프로세스의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도 존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또 한 일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관계는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다른 여타 양자 현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도 꾸준히 일 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치 우리가 외교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야당 일각의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사를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현재의 현안과 자꾸 연결시켜서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 측은 지금 다른 양자 현안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은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지난 19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국제사회에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이런 식민지 지배를 했던 많은 나라들이, 네덜란드로 치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영국은 케냐 식민지 통치

시기의 학살 또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리비아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모두 다 협상을 하거나 보상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일본만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관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그렇게 할 경우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 가만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이런 식민제국시대에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두 다 참회·사과 내지 보상·배상을 약속한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당연히 일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무슨 우리 정부를 꾸짖을 만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사법 권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서 피해자단체는 일단 사전 논의가 좀 미비했다는 우려도 표명합니다만 양국 간 협의의 사전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논리를 잘 세워서 대응해 주시고.

한일 관계의 문제는 비단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 평화와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연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문제인 정부의 기조이고요. 장관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분명히 ‘남북’이라고 돼 있고요, 목적어가 ‘그 어떤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맥락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잘못된 게 있습니까? 시비 걸만한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타국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연설이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오늘이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까 통일부장관께서 얼마나 인원 손실이 있었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국군·

연합군 합쳐서 대강 한 47만 9000명 또 중공군 90만 명, 인민군 52만 명 해서 약 150만 명 또 많은 민간인의 인적 피해,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추미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북의 느닷없는 남침은 사실은 당시 김일성이 3일 만에 남침을, 대한민국을 제압할 수 있다, 그것은 남쪽의 호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탈린으로부터 남침 승인을 받았다는 건 이미 역사적 기록의 명백한 사실인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거기에 무슨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리고 북한 스스로 전쟁기념관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방전쟁이라고 딱지 붙인 것은 스스로 기념관을 통해서 남침을 시인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추미애 위원 여기에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현재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에서 말꼬리 잡기, 시비, 온갖 억측, 색깔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만의 한심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매우 높고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이념 포화로 상임위도 열지 못하고 공전하는 동안 나라 밖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중국 경제를 호령하는 수장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 법률상담소, 중국의 로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북한 투자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추미애 위원 일본은 저명인사를 동원해서 북한 여행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는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북한 여행사가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모르는 척 외면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활발하게 북한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견인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우리가 대북제재를 핑

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만 또 그 한도 내에서 남북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위원** 작년에 제가 평양을 오랜만에 가 봤어요, 2007년도에 가 보고 11년 만에 갔으니까. 가 보니까…… 2000년도에 제가 한 번 가 보고 2007년도에 가 보고 2018년도에 가 봤는데 자꾸 변해 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특히 2007년하고 작년하고 사이에는 큰 변화가 왔어요. 물론 평양만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슬로건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투적인 슬로건이 별로 없고 교육과 과학을 강조한 그런 슬로건들이 많았고 우리에게 보여 주는 현장도 대개 그와 관련된 지역들을 보여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평양 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호텔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 보니까 물품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전에는 중국산 물품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북한산 물품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고, 보니까 전보다 물품의 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오고 있고 이른바 장마당도 많이 서고 있고 이런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때하고는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인데, 물론 인도적 지원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 외에 남북 간의 이런 경제 교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미국에 가서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은 북한이 이렇게 변해 가는 모습을 거의 잘 알지 못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하원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990년대 얘기를,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한의 변해 가는 모습을, 추이를 특히 미국에 있는 의사결정권자 이런 분들에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데 유엔제재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그 제재의 틀 속에 갇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행은 지금 제재 대상이 아닌가요, 제재 대상인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찬 위원** 관광 자체는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해찬 위원** 글썄, 평양에 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호텔에 많이 묵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것은 신청하면 통일부가 허가를 다 해 줘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에 관광 가는 것은 우리도 국내에 북한 주민 접촉승인에 대한 절차가 있고 또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위원** 일단 제재 대상은 아닌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이나 평양이나 개성이나 이렇게 가는 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이해찬 위원** 제 생각은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관광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 아직도 관광이 제재의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재에 관광을 많이 허가를 해서 우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쌀 보내는 것도 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도정을 해서 쌀로 해서 보내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위원** 주위에 가짜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말하자면 벼로 보내는 줄 알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을 해서 쌀로 보낸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상현** 예.

○**이정현 위원** 외통위의 실무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석 달 만에 이렇게 외통위가 모처럼 열리고 아까도 다들 얘기했지만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야 간에 간사 합의로 추가질의 없이 오전에 끝낸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기 위해서 그토록 국회 회의 열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 앞에 정말 낮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어차피 장관들이 다 오늘 회의 출석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비워 났을 거고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오후에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속 위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 통해서 와서 통보하는 이런 회의진행 방식을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취소해 주세요.

○**위원장 윤상현** 예. 하여튼 간사 세 분 중의 한 분이 지금 부재 중이고 또 간사 두 분이 계신데 한번 따로 간사 간 협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어요. 합의한 적이 없고 가능하면 1차 질의를 오전 중에 끝내자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분들이 있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합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들의 사정이나 분위기로 봐서 일단 1차 질의를, 대개 12시 반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보고 추가질의를 하면, 하실 분 있으면 점심식사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 질의를 다 끝내 보고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다음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통일부장관님,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관광을 하는 게 유엔의 대북제재 사항이 아

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박주선 위원** 아니, 관광 그 자체라는 말…… 그러면 금강산 관광을 가는 것이 유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러니까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관광사업에 관련된 법인을 통한다든가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축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거기 현금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관광을 하는데. 북한에서 무료로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돈 가지고 가 가지고 입장료 내고 숙박하고 하는데 현금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유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달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 미루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관광객이 개인으로 관광하는 것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아까 이해찬 위원께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관광을 하는 게 제재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관광이 가능하든 통일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허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신변안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통일부장관이 허가하는 과정의 고려사항이고 금강산 관광 자체를, 지금 북한에서는 강력하게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금강산 관광은 개인이 관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외교부장관님, 한일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악화된 기간도 없지는 않았어요, 독도 문제라든지 또 교

과서 문제라든지 등등 있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산적인 현안이 누적돼 있고 한일관계가 거의 외교적인 입장에서 중단되다시피 됐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악화와 갈등이 지속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과거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정상회담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오사카를 가시는 문 대통령께서 한일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 측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의 그런 희망 표명이 있어서 외교부로서는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박주선 위원**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본에서 응하지 않은 겁니까, 일본에서 응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굳이 정상회담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는 희망사항을 분명히 표했고요,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일본의 결정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일본이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G20 주최국으로서 의장국으로서 위치가 상당히 좁……

○**박주선 위원** 아니, 외교부장관한테 여쭙보는 건데, 저도 신문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외교적으로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와 유사한 답변을 계속 얻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외교부장관 강경화** 언론에 발표된 그 유사한 내용을 지금 계속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요.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되었듯이 G20 의장국으로서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외교당국을 통해서도……

○**박주선 위원** 이것은 외교적인 대한민국의 외교 수모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 20개국의 정상들이 가는데 그동안에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 왔고 지금 일본과 한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산적인 문제 때문에 반드시 정상회담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쪽이 거부를 하는 것은 한국 외교로서는 수모 아닙니까? 이것 외교적 참사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참사라고까지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이 확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제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위자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집행절차에 착수는 됐지만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일본정부로부터 강력한 외교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협정에 의해 가지고 청구권 배상금 받았던 5억불 중에서 일부 우리나라 기업에 지원을 해 가지고 기업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 포함해 가지고 일본기업까지 같이 출연을 해서 이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 일이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것의 핵심은 이번에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여타 한일 간의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는 그런 기금으로서 배상금을 문다 하는 것이……

○**박주선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기로 정부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합의는 없습니다. 다만……

○**박주선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연을 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만 그런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업에 출연을 하라고 강요 내지는 권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우리돈 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일 간의 그 기업들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고……

○박주선 위원 아니, 한일 간이 아니라 우리 정부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하고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표명이 몇 기업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어떻게 민간기업이……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바라고 있을 텐데 ‘그것 우리가 돈 내서 할테니까, 사재 출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느 기업이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밝혀드리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정부에서 지금 적폐청산 한다고 해 가지고 직권남용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대해서 금전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만일에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내에서 우리 기업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 하면 이권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 때 이게 아마 적폐청산의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하려면 사전에 국내에서 기업들 간에 논의도 하고, 특히나 위자료는 일반 물적 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속에서 금전적인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도 안 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사죄를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일부를 우리 기업의 돈으로 보충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자발적인 기여임이 분명합니다.

○박주선 위원 자발적이 아니고…… 장관님한테 누가 자발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돈 내겠다 하는 기업은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두 분 장관께 여쭙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친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미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북한 측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반응이 아니라 친서 내용을 북한으로부터, 혹시 남북 간의 채널로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천정배 위원 없습니까? 통일부장관이 모르시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외교부장관님은 그 내용을 대충 아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밝힐 수 있을 만큼만 밝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3국의 친서 내용을 저희가 전해는 들었습니다만 당사국이 밝히는 것이 상을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긍정적인 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뭔가 궁금한데 대체로 우리가 추정해 보면 북한이 바라는, 말하자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에 뭔가가 제안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제재 일부라도 해제라든가 체제 보장 같은 평화협정의 종전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냥 긍정적인 톤의 친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특히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에 김혁철, 스티븐 비건 간의 실무회담에서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다시 언급되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노이 회담 당시에 북·미 간에 잠정 합의는 있었습니까? 그때 언론 보도는 그게 있었다고 나와 있었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싱가포르 합의의 4개 축이 되었던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비

핵화 그다음에 신뢰 구축 이렇게 네 가지 축을 놓고 실무 얘기를 했었고요, 비핵화를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천정배 위원** 그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비건과 김혁철 간에 실무선에서의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합의요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요소요? 요소하고 합의안하고는 좀 다르지요. 합의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합의요소라고 말씀드리는데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합의는 최종적인…… 최종적은 아니지만, 어차피 잠정이지만, 그러면 실무선에서도 합의가 없는 상태로 하노이 정상회담에 들어갔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실무선에서의 합의요소가 있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합의가 없다 하는……

○**천정배 위원** 합의 요소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런 기본 전제로……

○**천정배 위원** 흥미로운 답인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가능성은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설령 DMZ를 방문하더라도 북·미 또는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오늘 다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마지막 방문에 실무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7일 날 비건 대표가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에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가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건 대표와 지난주 워싱턴에서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돌아온 이도훈 본부장께서 좀 답을……

○**천정배 위원** 아니 ‘예스, 노’로만 답해 보세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있습니까? 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 측으로서는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 중입니다만……

○**천정배 위원** 아니, 며칠 사이에 지금……

○**외교부장관 강경화** 실무합의가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이 대표 말씀해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며칠 내로 일어날 일 아닙니까? 북·미 간에 실무 접촉 있습니까?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마는 어저께 밤에 국무부에서 발표한 대로 27일 날 도착을 해서 정상회담이 바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시간상 충분한 절차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된 거나 똑같네요. 알았습니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의 부처는 아니지만 17일 날 국방부가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에서 북한 어선을 만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심각한 축소·은폐 시도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지 우리 집 인근에 손님이 왔다고 발표합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그러지 우리 집 인근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까? 군은 포를 쏘는데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거지 목표물 인근에 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의 문제는 군도 문제고, 또 청와대가 처음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청와대가 은폐나 축소 시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방부가 하는 이런 부적절한 발표·조치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못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목선은 8일간 500km가 넘는 구간을 향해 해서 남측으로 왔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고개를 끄덕임)

○**천정배 위원** 그리고 귀환한 선원 2명은 남쪽으로 가겠다는 선장의 지시도 순순히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겠지요.

또 그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오기 전에 하룻밤

동안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 이런 상황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귀순 아닙니까? 4명의 선원이 다 귀순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건데 단 한 차례 합동심문만 하고 부랴부랴 두 사람은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의혹이 큼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 비슷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4명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송환되고 2명이 귀순했지만 대체로 과거 사례는 1명이 송환되고……

○**천정배 위원** 아니, 좋습니다. 과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사례가 중요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저도 남북관계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주민이 남에 귀순해 왔을 때 돌려보내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장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맞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것이 우리의 헌법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도 엉성했다 이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며칠 더 두고 여러 가지 따져 보기도 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의, NGO 같은 데를 좀 참여시켜서 진위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훨씬 투명하게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한 일을 왜 핑계 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합동심사라는 형식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측면들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심재권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앞선 우리 상임위 논의를 보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국회가 3개월가량 열리지 않으면서 통일부장관께서 다양한 기회에 축사라든가 기조연설 등을 하신 건 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

다. 좋은 소통의 기회였고 만약 그게 더 필요하다면 야당 의원님들과 더욱더 많은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시점에 장관께서 다양한 기회에 우리 통일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일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참 큰 문제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외교부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밝고 힘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조와 함께 또 하나는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올바른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화해의 문제 같은 것을 두고서 미·중 갈등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로서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 상황에서 한미관계 또 한중관계를 고려하면서,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 무역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과 판단을 존중해 주는 태도 또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에 있어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당국이나 중국 당국의 언급에 비핵화 문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뭔가 새로운 제안이 평양으로부터 발신됐고 이런 것을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파악하는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개적으로 그런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것이…… 저희도 지금 면밀히 보고 있고요, 외교 당국을 통해서 자세한 브리핑을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주석과의 G20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 좀 자세한 이유가 공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이런 새로운 제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다면 그 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또 하나의 좋은 논의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추측성 발언일 때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일은 없겠나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서에서 참 좋은 언어들 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이로운 미래를 생각한다’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 능력과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볼 때 뭔가 실질적으로 하노이에서의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하노이에서 양측 서로의 입장이 훨씬 더 명확해진 상황에서, 그렇지만 하노이의 합의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가서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권 위원 대화 분위기·여건 조성에 그치는 건지,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진전된 내용이 있는 건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양측 다 하노이를 분석하면서 그 입장을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조율 과정에서 한미는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에 DMZ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시기적으로,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대북 긍정적인 메시지 발신은 긴밀히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북·미 간에 최근 오고 간 친서 정도의 내용을 양측 정상이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그 자체로써 굉장히 훌륭한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인도적 지원 문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국제적십자사 또는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원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종교적·인종적·이념적 편향성 없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위협 받을 때 이를 돕는 게 인도적 지

원입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럴 필요가 과연 있는가, 상대에게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도울 능력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봐야 되고 이것 두 가지 이외에 고려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7년 9월에 약속했던 800만 불 인도적 지원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참 늦었지요. 저는 우리 식량 지원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생각하는 건 오로지 그 두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이 그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그걸 도와줄 능력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저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는 맞추는 게 그 시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무슨 미사일 쏘는데 할 때냐?’ 등등 이런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로서는 반드시 중요한 건 그 두 가지 점을 보면서 거기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바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간도 없고 한마디, 우리 옛말에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함을 쌓으면 반드시 경사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지금 G20 정상회담이 28, 29일 오사카에서 열리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지금 동북아정세가 급격하게,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는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고립무원이다, 비교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도 하고 전문가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국민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징용 판결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한일 간에 한 발자국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은 징용 판결 문제는 민사고 또 우리나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지요?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외교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 하는 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이고 민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던 그동안의 입장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 입장의 기본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입장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판결이 작년 10월에 났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그동안에 초지일관 정부의 입장은 이것은 민사고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입장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입장 마련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던 거고요.

○정병국 위원 입장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초하고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지금 일단 정부 직접

관여……

○정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하는 것에 앞뒤가 모순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과거에 지금 현 아베 수상이 1기 수상 임명을 받고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이러한 유사한, 일본에서의 재판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하는 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나서 한 얘기에요. 사법부가 판단을 했건 행정부가 판단을 했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정부가 판단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판단을 한 거지, 사법부 따로 입법부 따로 행정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을 한 거지만 대한민국 따로 있고 사법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을 가지고 이미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정부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혀 준비 없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안도 덜컥 내놔요.

그런데 이 안을 보니까 제가 이번 상임위를 준비하면서 외교부 실무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 사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이 피해 당사자들하고 이 안을 만들 때 사전 협의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협의한 바가 없어요.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틀어지게 된 요인이 됩니까? 그 당시에 이 정부 들어서면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피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받아들여 질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했다고 백날 얘기를 해 봐도 그건 피해 당사자가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정부 때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의를 할 때에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협상안을 만들어라라고 누차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전철을 지금 이 정부가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안을 재판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덜컥 이런 안을 내놓고, 그것도 또 상대가 있으면 상대하고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는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그게 외교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수순은 뭐니까? 저는요 도저히…… 요즘의 우리 정치판이 이런 꼴이예요. 여야 간에 서로 다 성명전을 하고 그리고 정치는 실종이 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 자괴감이 드는데……

외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외교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물밑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척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런 일들을 벌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요 장관께서 정말 외교부장관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명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G20 회의가 열리는 그 외교무대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G20에서 왕따당한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장관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언론 보세요. 다 왕따당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 국민 여론이 그래요. 아무리 장관께서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불식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항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진지하게 들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병국 위원 충분히 이해, 공감을 하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정병국 위원 자,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왜 피해 당사자들하고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라고 논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못 한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게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병국 위원 아니, 사법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데는……

○정병국 위원 아니, 결론은 지난 10월 달에 나왔어요, 작년 10월 달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10월 달에 나서 그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후속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안을 정부가 임의로 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후속 절차……

○정병국 위원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법절차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외교부로서는 한일 관계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정병국 위원 한일 관계도 관리를 하려고 하면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이 된 안을 냈을 때 한일 관계에서……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피해 당사자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들도 양국 간 협의의 사전조치로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억지를 씹니까, 지금?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어렵게 고심 끝에 마련된 내용이라……

○정병국 위원 고심 끝에 나온 것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순을 밟아 가지고, 과거 정부가 이러한 전철을 해서 문제를 크게 야기시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윤상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친서, 김정은은 트럼프 친서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 능력’ 또 ‘남다른 용기’ 그다음에 ‘흥미롭다’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친서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냥 형용사만 남발을 했어요, ‘아름답다’ ‘개인적이다’ ‘따뜻하다’ ‘멋지다’. 김정은 친서의 내용은 아마 구체적인 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데 트럼프의 서한은 굉장히 구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높은 제안이라고 보았던 것인지. 남다른 용기, 용기도 그냥 보통 용기가 아니라 남하고 다른, 보통 사람의 용기가 아닌 아주 특별한 용기다 하는데 해 보지 않은 제안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용기, 해 보지 않은 일을 과감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 정부가 보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 중에 정말 우리 정부도 트럼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매우 높았고 남다른 용기가 있고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거나 1차 회담 때의 군사훈련 중단과 같이 깜짝 놀라 가지고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내용을 받은 건지, 조금 모호하게 그 내용을 통보를 받은 건지, 아까 김정은이 표현한 그 세 가지 그것을 우리 정부도 동의합니까? 친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북측의 그런 평가와 그런 발표는 북측의 향후 협상을 앞둔 어떤 계산에서 나온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그 친서 내용에 있어서, 친서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친서의 속성상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디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까 했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측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은 또 아니겠지요.

○**이수혁 위원** 아니, 보니까 정치적 판단 능력

이 매우 높은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그 이상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수혁 위원** 아니, 그것은 평가해 줄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남다른 용기가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수혁 위원** 왜요?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편지를 쓴……

○**이수혁 위원** 김정은의 평가도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내용을 쓰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나중에도…… 트럼프가 무슨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이 실제 북한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정부가 깜짝 놀라거나 보수 측으로부터 또는 진보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럴 요소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게 지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표현이 이렇게, 이런 코멘트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내용이 궁금한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형용적인 표현조차 동의하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측의 그런……

○**이수혁 위원** 부분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는 것인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다만 저희가 미 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톤이었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톤이고요. 북측이 편지를 분석해서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북측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혁 위원** 그건 무슨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무슨 계산?

○**외교부장관 강경화** 앞으로의 어떤 협상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이수혁 위원** 희망적으로 길을 잘 깔아 놔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한 장짜리 안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그런 뭐를 시사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코멘트하기가 어렵지요, 물론 친서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영변 시설 해체 문제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 저는 혹시 내용 속에 영변 시설 해체와 제재 완화든지 해체든지 이것이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결렬이 됐는데 이에 대한 어떤…… 비건이 다시 강조한 게 단계적·동시적·병행적을 다시 강조했거든요. 스탠퍼드 연설문을 재확인했다 말씀이에요, 우리 정병국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세균 의원 해서 갔었을 때. 그걸 다시 강조를 하고 스탠퍼드 연설문 아직 살아 있다, 기본적인 미국의 그 입장은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전이 있을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네 가지 어젠다에 대한 세 가지는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서명하려고 한 게 그거였지요, 핵 문제를 빼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이번에 비건이 또 만들어서 북·미 3차 정상회담에 내놓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번의 비건 방한 목적은 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좀 교환하려고 오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차적으로 계속되는 공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실무 협의에서 무슨 북한에 제안할 것에 대한 우리 정부와의 협의가 있는 건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본부장의 협의는 지난주에……

○이수혁 위원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있었고 이번에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오전 질의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외교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 정상 간의 교환된 편지에 대한 소감을 뜯어보면 참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받고 한 얘기가, 소감이 ‘개인적인 편지’이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편지였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보여질 때는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내년의 대선과 관련된 것이랑 연결될 수도 또 노벨평화상과 관련된 얘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편지겠지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그랬어요.

남다른 용기, 남다른 용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혹시 DMZ를 방문했을 때 관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든 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하든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갖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일 때 오슬로포럼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문 대통령께서 연설한 곳은 옛 하원의사당인데 뮌헨 여사가 세계군축 노력을 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같은 지도자들도 여기서 연설을 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방한을 하면서 DMZ 관문점을 방문할 예정인데 남·북·미 정상회담이 관문점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님 어떠십니까, 제 상상이 완전히 잘못

된 상상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여러 가지 상상 또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서는 그 세부 일정이 아직도 조율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DMZ 방문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조율 중이고요.

정상 간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나 추진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상당히 그 준비 과정이 제약돼 있는 상황이 있다는, 지금 시점에서요, 그래서 좀 그게 과연 가능할 건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원유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이도훈 본부장께서 지금은 결론은 안 났지만 추진 중이다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했어요, 실무적으로, 비건 대표하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여러 가지 스케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진은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미국 측으로서는 언제든 실무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원유철 위원** 그러니까 남·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저희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언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호응을 하고 합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외교 일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위원** 그런데 장관님,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여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 내고, 또 세 분이 노벨평화상 받으면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태세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우리 혼자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측들의 그런 여건도 마

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위원** 추진은 그러면 하고 있다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상 간의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서 아직 디브리핑을 받았다는,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기는 G20 계기에 정상 회담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유철 위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저는 성공한 방한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게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는 앞으로 판문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회담이 추진되건 간에 정말 흥미로운 회담, 보여 주기 식의 회담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회담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오전부터 이어지는 위원님들 질의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조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구도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시작된 거냐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미 간에 주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혹은 능동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핵화 구도에서도 중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의문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 관련한 역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국면의 전환과 관련해서 혹은 새로운 구도의 등장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삼각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논의를 하고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조금 원론적 수준의 대답을 넘어서요 3자 구도냐 4자 구도냐 어떤 것으로 이렇게 정형화된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 선택 이런 것보다는, 때로는 한중관계에서 혹은 북·미 혹은 남·북·미 이런 관계에서 3자 구도, 4자 구도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는 것보다는 우리 국익이라든가 혹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혹은 실사구시적인 이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라면 조금 유연하게 한국 정부가 정세를 활용하고 대처해 나가는 이런 접근법을 가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우리 외교에 있어 가지고 이번 주가 슈퍼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평양 갔다 온 것에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G20 회의에서 연쇄적인 당사국들 간에 혹은 한반도 평화 주변국들 간에 그런 회동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어떤 성과가 기대되고 또 어떤 것을 주로 우리는 목적으로 해서 외교를 펼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그런 어떤 전략적 목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방문 이후에 특히 얼마 안 돼서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곧 이어서 G20 계기 한·러정상회담도 잡혀 있습니다. 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런 정말 정상 차원에서의 어떤 상호의지 방향을 확인하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한 방향으로 모아져서 결국은 북·미 간에 그런 대화가 재개가 돼서 비핵화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또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이 이전 상임위 때 드렸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북이 대미 교섭력·외교력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다녀오고 또 시진핑을 평양으로 국빈 초청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행위들은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중국도 다른 한편에서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이런 것 속에서 북을 또 하나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건 아니면 어떤 형태건 간에 한반도 평화 문제 당사자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높아 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물론 한미 간의 공조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튼튼하게 지금도 진행되겠지만 동시적으로 똑같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서로 공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물론 주변 여타국들과도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얼마 전에 러시아를 다녀왔고요. 중국과도 여러 레벨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제가 지난번에 OECD 계기에 고노 외상과도 만났고 또 실무 차원에서도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결과적으로 최근에 조성되는 정세와 관련해서 통일부나 외교부가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정책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남북정상회담입니까 아니면 북·미 간의 대화의 재개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상호 추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북·미 대화가 재개가 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다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북 간에 과거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의 추동이라는 그 차원 말고도 다른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통일부장관님, 뭐 가지권에 들어올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목표는 비핵화의 해결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 이 세 가지가 동시 병행적으로 서로 선순환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이번에 얻을 목표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도 본 위원회 소속으로 한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대북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도 한 3개월 전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북한에 대한 쌀 5만t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쌀 그 자체는 전략적인 물자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5월 4일, 5월 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와중에 저희가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자칫하다가는 북한 도발에 대한 어떤 굴복 내지 보상으로 읽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에 쌀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의 쌀 사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국제적인 공감대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WFP와 나름대로의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했고 또 좀 부족하겠지만 국내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께서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 나름대로는…… 종교계라든가 민화협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대표적으로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단체들과 나름대로 논의를 좀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WFP에 우리가 쌀 5만t을 이양할 때 육로로 합니까, 아니면 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중으로 합니까? 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통상적으로 쌀의 규모를 생각하면 해상이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해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선박이 미국의 대북제재 품목입니다. 그걸 미국 측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지금 인도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항구까지 우리 정부가 맡고 항구에서 출발하게 되면 WFP가 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보험 문제와 또 포괄적인 제재 면제와 관련해서는 WFP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이 선박 자체가 미국이 내건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 선박과 관련해서는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위원장 윤상현** 밟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 부분도……

○**위원장 윤상현** 그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WFP가 그걸 밟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다음에 삼척항 부두에 온 북한 동력선 그것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

데 그게 어선으로 보입니까, 장관님? 이게 어선인지 아닌지 제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어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런데 어민 있지요, 또 이게 어민이라는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고기잡이하러 나갈 때 정장으로 말끔하게 옷을 차려 입고 가나요? 도대체 그건 계속해서 증언하는 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이 합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옷을 말끔하게 차려 입었다는 그 북한 사람 그 사람은 귀순했습니까, 아니면 북으로 귀환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한번 따로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래서 이게 참 정말로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맨 어선이나, 북한에서 출발할 때 1.8t짜리 목선에다가 연료도 제대로 채우지도 않고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4명이 와서 2명은 돌아가고 2명은 남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귀순인지 아니면 작전인지 정부 측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합동조사, 국정원·해경·경찰 이쪽이 했겠지만 적어도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쳤거든요, 장관님. 그러면 식사하고 자고 휴식시간 빼면 하루 네 사람을 언제 그걸 조사를 마쳤을까…… 이게 정말 확실한 조사가 됐는지, 이게 정말로 작전인지 아니면 귀순인지 합동조사 과정에 대해서 NSC 정도에서는 장관님께서 ‘야, 이것 좀 납득하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그런 의견은 제시한 적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완돼야 될 매뉴얼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통일부장관, 대북 쌀 지원,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쌀 지원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요구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한 당국이 WFP에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WFP에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쪽……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건 WFP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식량이 부족한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WFP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내는 쌀이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가면 언제쯤 도착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최대한 9월 이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9월 이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10월, 11월 이때쯤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추수를 해 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그렇게 쌀이 모자라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도정을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직 쌀이 부족하지 않은 거기 그 시점에 그 쌀을 보내 가지고 보관도 안 한다, 주민들한테 안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당국들이 보관하고 또 당국들이 활용한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 겪어 봤었지만 춘궁기라는 게 3월·4월·5월 달 이때쯤 되는데 이렇게 보릿고개 같은 춘궁기 때 안 보내고 지금 이렇게 보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 때 보내게 된다면 결국 북한 당국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생각은 해 보셨어요, 뭐 깊이 안 하더라도?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제 많은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남한을 포함해서 무상으로 이러한 물건들이 전달이 됐을 때 북한에 막 살아나려고 하는 이러한 시장경제 싹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분배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WFP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여정, 김여정 씨의 공식 직함이 뭐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당 부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부부장이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딱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장관급은 아니고 한 차관급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한의 권력구조를 우리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건 물론 그렇지요. 똑같을 수는…… 만약에 보통 그쪽에서 부부장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김여정 씨 아닌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는 파트너로 누가 나갑니까? 어느 급이 나갑니까?

이번에 조화 수령하러 가실 때 통일부에서 차관이 나간 것은 차관급으로 보고 나간 것 아닙니까? 장관이 왜 안 나가고 차관이 나갔습니까? 부부장을 일단 차관급으로 보고 나간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아닙니다. 안보실장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통일부차관이 나갔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게 좀 너무 과잉 의전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자주 접촉을 하게 되는데 무슨 지도자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도자급이라고 하면 동네 이장도 지도자인데 도대체 어디를 보고 지도자급이라는 이런 직함을 부여해 가지고 합니까?

적어도 이제는 자꾸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모든 것을 훈련도 시키고 또 맞춰서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해야지요.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김여정 씨가 어떤 위치인가 봐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나가야지 김여정 씨 한 분 내려오는데 그렇게 청와대 안보실장도 나가시고 통일부에서는 차관도 나가시고 또 그밖에 다른 사람도 줄줄이 그렇게 나가 가지고…… 사실 조화 수령하러 가면 거기 누가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조문을 받는 거기의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지 뭇 때문에 정부의, 더더구나 청와대에서 이렇게 줄줄이 나가면서 의전에 이렇게 과잉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트럼프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주일미군기지 연설에서 ‘일본해’라는 말을 썼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해’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동해’라고 하는 말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그럴 때마다 미국한테 저희 입장을 즉각 전달하곤 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최고의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한테 ‘동해’라고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계기가 되면, 그럴 계기가 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것……

○**이정현 위원** ‘계기가 되면’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DMZ 방문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같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아직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며칠이나 남았다고, 아직 대통령의 일정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아직 안 정해졌다 그 말입니까? 좋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좋을 건데……

이번에 하여튼 오는 데 있어서 최우선 의제는 뭐니까? 지난번에 같이 가 가지고 2분 동안 회담하는 것 말고 이번에는 몇 분 동안, 단독회담이라든가 의제와 관련된 그런 회동은 몇 분 정도 하게 잡혀져 있습니까, 현재? 식사 빼고, 오찬이나 만찬 빼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오찬 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상회담 하고 오찬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제를 놓고 몇 분 말씀하실 거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이고 참말로. 아니,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히 오기를 바라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오시게 됐는데 의제가

아직도 안 정해져 가지고 무슨 얘기를 나눌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들 앞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납득 가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몇 분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과 같이 대통령 만나 가지고 2분 동안 만나는 국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정상적인 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SLBM 발사 준비 정황 보도가 있었는데 통일부장관,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걸 정말 대륙간탄도탄이 아닌 잠수함을 타고 가 가지고 근처에서 때리겠다는 건데 이것 어느 정도 파악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일단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다음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부장관, 어선 폐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했다,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따졌습니다마는 ‘매뉴얼에 따라 처리 폐기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어 있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석호 위원** 그러니까 여론의 악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박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까 얘기는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합동정보조사팀의 결과를 받아서 북한 선박을 폐기 처리로 브리핑한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원을 송환할 때는……

○**강석호 위원** 아니 글썄, 알아요. 제가 묻는 말씀에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선박을 북방한계선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선박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동정보조사팀 결과를 받아서 북한 선박을 폐기 처리로 브리핑한 거냐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내용이고.

○**통일부장관 김연철** 선박 처리에 대한 일반 매뉴얼을 따랐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합동정보조사팀의 의견은 듣지 않고 오직 통일부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따랐다 이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것 통일부 매뉴얼이 아닙니다. 부처 간 합동 매뉴얼입니다.

○**강석호 위원** 아까는 또 통일부 매뉴얼이라 했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전체 매뉴얼 중에서 통일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북 조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강석호 위원** 말을 자꾸 어렵게 듣지 말고…… 합동정보조사팀 판단으로 예를 들어서 인도가 불가능하니까 통일부는 그렇게 발표했다 그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되지 자꾸 판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답변을 똑바로 좀 하세요.

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강석호 위원** 오전에 타 위원님의 질의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강석호 위원** 아니, 결정은 안 됐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강석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2시 51분에 청와대에서 ‘G20 기간 한일 정상회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네요, 정무고위관계자 이름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강석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전에 우리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청와대가 오후에 이렇게 발표를, ‘G20 기간 한일 정상회담

없다' 이것은…… 물론 청와대가 키를 갖고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외교부장관님의 답변과 오후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던 외교부 패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물론 장관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어때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가 외교당국을 통해서, 상대국의 외교당국을 통해서 듣는 것과 또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측에서 갖고 있는 선을 통해서 듣는 것하고 상당히 긴밀히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브리핑에서 그런 언급이 나왔다는 걸 점심시간에 보고를 받았습시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금 점점 더 다가오는 상황에서, 아직 일본에서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준비가 우리는 돼 있습니다만 일본 측에서 아직 반응이 없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글썽요. 그것은 장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정부 측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로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안 그래도 외교부와 청와대가 엇박자가 난다는 그런 부분인데, 오전에는 우리 장관께서는 정말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관계의 복원이라든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라고 가능성을 오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장관님 쪽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발표를 하는 것하고 일인지하에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 없다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7월 21일로 잠정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7월 22일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한일 관계를 일본 정치세력들, 정치인들, 정치 집단은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마치 한국을 때리는 것이 일본에 득이 되는 것처럼 대중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거 분위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도 뜨뜻미지근한 것 아닌가 저는 그

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로 한일 관계에 해박한 분들이 오늘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일각에서의 질타가 있었지요. 마치 우리가 한일 간 외교 분쟁의 단초,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분명히 바로잡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사를 현재의 외교, 한일 관계의 미래에 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는 것이고 또 한일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언급하셨지만 장관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셨어요. 집권당, 정부를 혼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너무 나아가서 과거사에 대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 피해 또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전쟁범죄와 그 인권 잔혹사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은 채로 마치 우리가 한일 관계의 관리를 잘 못하는, 우리에게 무슨 책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야당이야말로 저는 국익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장관께서 일관되게 입장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 오전에 당부드린 것처럼 전쟁범죄를 저지른 쪽은 현재의 국가가 국제역학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있다고 치더라도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사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강한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아까 야당 일각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은 것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만약에 피해자들이 일본 측의 진정한 사죄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받아들인다에 선후관계가 잘못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답변은 오전에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협력에 대해서 남북 간에 기본합의를 한적이 있지요? 언제 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농업협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여러 가지 합의문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2005년과 2007년에 두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가뭄 또는 기후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 것에는 실제 우리가 이런 농업협력 합의를 남북 간에 잘 이행했다라면, 꾸준히 그러한 농업협력 분야, 정치와 무관한 분야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면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우리 나름의 내재적인 힘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전에 전임 통일부장관님의 현 장관님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질타와 꾸짖음이 있었는데 다른 입장인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임 장관의 충고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해 주라라는, 이 봉착된 국면에서 그래도 통일이부가 유일한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하려는 의도로 그러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렇다면 북한이 자립할 토대를 열어 주기 위해서, 농사짓는다면 뭐가 됩니까? 비료 들지요, 농약 들지요, 또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하다 그러면 양수기·발동기 가동시켜야 되니까 에너지가 들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시설이 확충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는 적어도 줄 수 있는 돌파구를 내놓으시고 또 그것을 국제사회에 호소도 하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 질타가. 지극히 타당한 질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농업협력은 호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협력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북한도 이익을 보는 측면들이 있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그런 이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농업협력을 하기 위해서 통일이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돌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미회담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지만 결국 결렬과 무산이 되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런데 북한의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제작한 강습제강이라는 당·정·군 간부에 대한 교재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전연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이런 교재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지난 11월 달에 ‘미국과 핵 담판을 한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신고를 극복하면서 만들어 낸 핵 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 전력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으로 이 교재에 담겨있다 이런 거예요. 또 ‘세계적인 전략 핵 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 교재에 담겨져 있다는데 미국의 소리가 이런 보도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진위 관계를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건을 입수해서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등등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공식 문건이 아니고 대내적인 일종의 선전사업에 사용하는 문건이라고 VOA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문건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

습니다.

○박주선 위원 확인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을 주장하고 또 중재자, 촉진자 여러 가지 역할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집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과 환경으로 볼 때 우리 뜻대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한 홍보성 언어의 유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재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도대체, 중재내용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재해 가지고 비핵화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뜻일 텐데 중재의 구상과 복안은 그 내용이 됩니까? 또 촉진의 역할을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촉진한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도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말만 아주 무성하게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중재나 촉진의 결과가 2월 달 하노이회담 결렬된 이후로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대통령께서도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실상 중재자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무런 결과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북중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도 또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졌을 때 대통령께서 북유럽을 방문하는 중에 이미 친서가 갈 것으로 알았고 친서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다, 거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친서 보내겠다는 이야기 우리 정부에 먼저 알려줬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혀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말이, 말씀하신 흥미로운 내용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고……

○박주선 위원 말씀하긴 어려운데 그러면 장관은 흥미로운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이상, 저희도 외교 통로를 통해서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선 위원 아니, 흥미로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친서의 내용을 미국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북한에서 온 친서 내용은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트럼프가 북한에 보낸 친서 내용도 통보받았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거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가지고 심중 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표현은 친서에 대한 평가고요. 우리는 그 친서 내용 자체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양쪽 다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해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친서 교환만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친서의 내용으로 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톤이고 양쪽 정상과의 대화 지속의 의지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와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또 정상회담 가기 전에 실무협상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양측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외교부장관님,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작년 10월 판결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외교부에서 일본에 제안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한일 양국 기업에서 기금 만들어서 배상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내용은 지난 1월에 청와대가 비상식적 발상이다 한 것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8개월 만에 만든 제안치고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내놓은 제안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우선 꼬리만 보여 준 것이고 일본이 이에 좀 응해 나오면 진짜 몸통이나 뭐 다른 것들이 또 있는 것으로 준비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는 그간 다양한 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가장, 물론 많은 부족함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안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예컨대 일본에서 ‘좋다. 한국에서 제안한 대로 이렇게 하자. 한일 양국 기업이 기금 만들어 배상하자’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오면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우리의 제안이에요. 제 말씀은 일본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제안이…… 우리가 오픈 아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그 오픈을 일본이 받아 주면 그걸로 일단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강제동원 문제는 더 이상,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수용할 경우에 저희가 일본이 요청한 3조 1항 외교적 협의를 수용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더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해결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의……

○천정배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질문입니다. 예컨대 일본이 이 문제를 승낙하고 온다면 그다음 단계로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거나 얻어 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서 3조 1항 협의 절차를 수용하는 것을 검토할……

○천정배 위원 협의에 들어가면 다시 우리 정부로서도 요청할 게 많이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협의에 들어가면 그 협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또……

○천정배 위원 그러면 협의하면서 일본한테 뭐를 요구할 겁니까? 뭐를 받아 낼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것은 지금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해야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천정배 위원 갖고 있을 텐데 말씀 안 하시는 거겠지요. 그렇게 말씀해야 맞는 것이지 8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침을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꼭 밝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복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걸 여쭙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가능한 그 복안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천정배 위원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일제 식민지 지배의 기원을 이루는 협정과 조약이 애초부터 무효다, 그래서 식민지는 완전 불법행위이고 그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이런저런 동원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는 대한민국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국민을 동원해서 가서 여러 가지 한 건 전체적으로 불법이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배상하라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란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돈만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로서는 식민지 지배의 기원을 이루는 협정과 조약이 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일본으로부터 얻어 내야만이 우리의 100% 만족이 있을 수 있는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호락호락 그것을 인정하고 나올 수가 없겠지요. 제가 끝까지 강경론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아마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런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일본하고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북·미 간에 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그러니까 비핵화나 체제유지나 이걸 가지고 협상이 돼야 타결이 되는 것이지 몇 가지 가지만 가지고, 제재 해제를 일부 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궁극적인 협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칙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 예컨대 우리 독도 문제를……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독도에 관해서 양국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완전히 어려운 관계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제시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가면서도 동시에 우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돈 물어 주는 문제는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안 물어 줄 수가 없지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기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전제 위에서 원칙을 세우고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하신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유념해서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준비를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온 4명의 북한 주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원이 다 파악됐습니까, 4명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는 합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귀순자의 경우에는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원유철 위원** 그래도 장관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4명의 이름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북한의 주거지는 어디이고 또 직업은 무엇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하여튼 귀순한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유철 위원** 글썄요, 밝히지 않는 걸, 비공개 원칙이라 하더라도 장관님은 지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원유철 위원** 그런데 이제 2명은 귀환하고…… 2명은 송환됐지 않습니까? 송환됐는데, 송환된 사람, 북한 주민 두 분에 대해서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대체로 연령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연령 정도가 아니라 이름하고 직업 정도는 당연히 아시겠지요. 4000명도 아니고 4만 명도 아니고 4명인데 그 정도는 지금 눈 감고도 아시겠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 통일부가 합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합심의……

○**원유철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합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통신문 보내고 그러잖아요, 통일부에서.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원유철 위원** 그것 당연히, 통신문 보내고 그

럴 때 이름하고 인적사항 다 기재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하세요, 장관님? 아니, 통지문 보내서 북한하고 협의하는 것은 통일부 아닙니까, 아무튼?

○통일부장관 김연철 맞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런데 자꾸만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되지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모를 찾았던 사람 있잖아요. 내려와서 남한 주민한테 ‘휴대폰 좀 빌려 달라, 이모하고 통화 좀 해야겠다’ 했던 분 있잖아요. 이모를 찾았던 분 그분은 송환됐습니까, 아니면 귀순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들이 합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원유철 위원 장관님,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하세요?

송환된 두 분하고 한국에 남아 있는 두 분 그 중에 이모 찾은 분이 북한으로 갔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약에……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모를 찾았던 그분, 이모하고 통화시켜 줬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통일부는 합심 결과가 다 끝나고 나면 대북조치와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원유철 위원 그러면 6월 17일 날 북한선원 송환계획을 통일부에서 세워서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 통지문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유령을 보내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유령 인간을? 거기에 이름을 다 쓰고 나이도 쓰고 송환되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서 보낼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름은 쓰지만 그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학교를 나왔고……

○원유철 위원 그게 정말 무슨 국가 보안사항에, 국가 기밀사항입니까? 북한 주민 4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2명은 대한민국에 남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모를 찾았던 사람 그분이 이모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모하고 만났는지, 이모를 왜 찾았는지 그걸 알

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장관님께.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대체로 귀순자들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권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북한 주민이 이모를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분을 억지로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질문의 핵심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통일부장관 김연철 귀환과 송환의 기준은 정확하게 의사를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겠다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을 정확히 하시면 이런 궁금증이나 의문을 해소시킬 것 아닙니까? 자꾸만 장관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통일부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과연 이모를 찾아온 그 북한 주민에게 따뜻하게 이모를 만나게 해 줬는지, 통화를 하게 했는지, 그분의 의사대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조치를 해 줬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자세한 처리 내용은 위원님 따로 뵈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따로 볼 것 없이. 전 국민한테 얘기 좀 하세요, 솔직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분들한테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호도 하고 대한민국을 찾은 모든,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게 하는 나라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못 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자유의사를 확인하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정부에 관계없이 쪽 있어 왔던 매뉴얼이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유철 위원 나중에 의사와 관계없이 통일부가 처리를 했다 하면 이것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유철 위원** 그 이모는 찾았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이모가 누군지 밝힐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사람들 많지도 않은데……

○**위원장 윤상현** 7, 5, 3 하고 그다음에 또 한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나는 다음번은 1분이요?

○**위원장 윤상현** 아니, 1분 아니고 마지막에 할 테니 일단 하시지요.

○**이정현 위원** 아니, 얘기를 하다가 자꾸 끊어지니까 계속 하게 되잖아요. 한 5분 주세요, 몇 분 안 되는데.

○**위원장 윤상현** 예.

○**추미애 위원** 제 것까지 드리세요.

○**이정현 위원** 정박 귀순에 대해서 추가로 좀 물을게요.

아까 통일부는 대책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대책회의를 안 했다고 그랬지요? 일상적인 그런 회의만 했지 대책회의를 안 했다 그랬지요, 오전에?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저희들이 대북조치……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대책회의를 안 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 김연철** 저희 회의하면서 계속 보고는 받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청와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현장에, 행정관하고 직원 둘하고 셋이 와서 현장을 다 뒤지고 조사를 해 보고 녹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까지를 다 점검을 하고 갔어요. 아까 합동심문, 그런 여러 가지 합동 기관들도 있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것에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회의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이 배 안에 있는 그물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완전히 새 그물 그대로 있어요. 고기잡이를 하다가 넘어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 그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물으로 올라와서 담배 피우던 두 사람 말고 인민복을 입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칼다림질을 해 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멋쟁이…… 다림질한 칼주름 옷을, 뽀뽀하게 다려서 입고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밝혔나 하면, 이게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그때 신고했던 목격자가 다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뒤늦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아까처럼 6일 동안을 넘어왔는데, NLL을 넘고 또 밖에 정박해 있고 이렇게 해 오고 할 정도로, 이런 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고기도 안 잡고 이렇게 내려왔었다, 뽀뽀한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데려다 주고, 공식적으로 우리 호위 받아서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더더구나 그 동력선으로 해 가지고 통통거리고 와 가지고 할 정도로, 6일 동안 온 이 배가 낚아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서두른 것도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북한에서 실수로 넘어왔다가 다시 퇴각하는 경우도 있고 한 것을 제가 통일부에서 받은 기록이 있어요, 5년 동안의 기록이. 여기 보면 아무리 빨리 온 경우도, 예를 들어 오늘 왔다면 내일, 하루 정도, 그리고 거의가 다 6일, 7일, 10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온 의문이 많은 사람들을 두 시간 만에 서둘러서 보냈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을 보내라고 북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데 위원님……

○**이정현 위원** 그 부분만. 요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이것은 요청을 받고 안 받

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두 시간 만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서로 입을 맞추까 싶으니까 따로따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넘어와도 발견도 못 하고…… 발견을 못 한 척하고 있었겠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두 시간 만에 이걸 보내 버려요? 이걸 누가 납득을 하고 믿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그런데 두 시간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정현 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연철** 조사는 만 하루가 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북한에 돌려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게, 왜 두 사람이 가게 됐는가하고 아까 이런 복장으로 사람들을 오게 했으면 그 6일 동안 같이 넘어온 사람들이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는가, 북한에 가고 싶어 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뒤에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요? 그 많은 기관들 다 놔두고? 통일부조차도 대책회의도 안 한 그런 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김연철** 위원님에게 이미……

○**이정현 위원**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윤상현** 예.

○**이정현 위원** 이것을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걸 외통위가 주관이 되고 정보위라든가 해수위나 행안위까지 해 가지고 합동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의구심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는 문제여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 밝히라고 국정조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부 모른다 그러고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일단 사실이 다른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시간 심문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주선 위원**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 다섯 명이 제기했다가 지금 세 명이 작고하시고 두 사람에게 대해서만 확정이 됐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판결을 보고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양국,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공동출연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외교부 제안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에 돈이 없거나 일본의 패소했던 기업이 부실하거나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일협정상이 청구권은 소멸이 됐다는 주장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반은 우리가 델 테니 반은 일본기업이 대시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이 수용을 하겠어요? 이런 하책 중의 하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은 우리 기업이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수십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반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다’ 하고 돈을 적극적으로 부담할 의사를 정부에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런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일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 측에 저희의 정리된 이런 입장을 사전에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본에 일본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다 하는 입장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래서 그런 양국 정부의 입장이 지금 다른 상황에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번 발표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이 사안을 국내적인 사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또 소송 당사자들의 사법적인 권리도 충족시켜 드리면서 양국 관계의 이견을 좀 더 좁혀 나간다는 뜻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있었지만 우리로서는 일본 측에 대해서도 이것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견을 했거나 판단했느냐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로서 상당히 고심 끝에 마련된 이 안에 대해서 일본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입장이고, 일본이 거부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외교적인 망신이고 이게 주권국가의 외교의 수모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일본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안 주겠다는 취지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 반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차라리 3분의 1만 일본보고 부담하라 그리고 우리가 3분의 2 부담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80%는 일본이 부담하고 우리가 20% 부담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반반씩 하자고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반반이라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핵심에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해서 양측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을 한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 장관님, 그러면 일본은 한일협정에 근거해 가지고 이 소송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내 일본이 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일협정으로 해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당장의 문제는 지금 확정 판결로서 어떤 배상을 받은, 소송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까를 고민한 부분으로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징용 문제라는 그 전체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이것은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불법성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일본기업에서도 불복의 절차를 포기하고 더 이상 불복할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배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 피해자들이 돈에 급급해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법 절차의 결과로 나온 것은 그 배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선 위원 아니, 배상인데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동의나 수용 답변도 받지 못하고 또 우리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퇴짜 당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안을 제안한 외교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외교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병석 위원 제가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자민당의 외교책임자 그리고 한 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과 대표단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등 일본의 책임 있는 의원들을 한 삼십여 분 만났습니다. 또 그 외에도 주한 일본 특파원을 지냈던 일본의 중견 언론인들—대개 국장급이고요—그리고 도쿄에 가 있는 한국 특파원들도 두루 만났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중순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국내 정치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고 공식회의 외에 따로 사석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그리고 대외비로 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을 때도 일본 측의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관계를 보면 그동안 미래지향적 관계와 과거사 이 투트랙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일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일청구권 협상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이다 하는 게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 당사자들의 마음의 치유가 이뤄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법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의 마음의 치유라는 것을 양국 정부가 정서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고 일본의 책임자들에게 제가 강조한 사항이었는데 외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아픈 역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응어리가 아직 해소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결국은 국내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 국내 소송 결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그 판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상당히 위안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판결 자체를 이행하는 부분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또 정부로서는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맥락에서 외교적인 입장을 만들어 나가느라고 다양한 안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이번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흠족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이게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합당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들,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을 우리가 재협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파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을 분명히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원칙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런 입장을 만들어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일본 측은 이 문제를 중재위로 가져가겠다, 중재위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일본의 태도가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을 때 새로 부임한 남관표 대사에게 일왕이 임명장을 주고 몇 시간 만에 외교부가…… 남관표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이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제가 일본의원단들하고의 면담을 할 때 십여 명씩 나왔어요—지적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한다는 것은 일본의 국력과 개방사회라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려면 한국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소위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안을 냈을 때는 우리 한국정부는 일본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각계 통로를 통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2분만 주세요.

○**위원장 윤상현** 2분.

○**박병석 위원** 각계 통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오랜 고심 끝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일본이 깊이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자는 건설적 제안을 우리가 성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재위 제소에 관해서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지극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나라로서의 처신이 아니다 하는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상대국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외교부장관으로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일본도 우리가 고심 끝에 만들어 낸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위원** 오늘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비판스러운 결정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과거사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른 진실규명과 치유를 해 나가되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열어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일본 측에서 많은 분들께서 귀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일본 측의 외교당국과 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2차 추가질의도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해 보고.

○**위원장 윤상현** 일단 그러면 넉넉히 5분 드리 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5분 주면서 넉넉이라고 해요? 그냥 5분 준다고만 하셔야지.

외교부장관께 일본징용 기금과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좀 비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정말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정현 위원** 아니, 그동안에 해 왔었던 정부의,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접근해 그동안에 해 왔었던 그런 당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기업하고 한국기업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견제가 한 말이 아니고 김의겸 대변인이 1월 달에 했던 말인데 아주 펄펄 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허구 위에 허구를 쌓는 얘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발상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상당히 거기 말이 맞다고 봅니다.

우선은 왜 우리 기업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기금 내고 하는 것을 정부가 맘대로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기업들은 돈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맘대로 기업들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정부가 기금 내라면 내야 되는 거고 이것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대법원 판결은 일본기업으로 하여금 이것을 판결하라는 것이지 대법원 판결에 한국기업보고 이것 내라고 한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기업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었고.

지금 한국기업이 여기 참여해 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 그 돈의 성격은 뭐니까? 위로금입니까, 배상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해당액을……

○**이정현 위원** 위자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급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위로금입니까? 말하자면 일단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아니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사실 일본기업보고 돈 내라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한국기업을 참여시킨 이유는 뭐냐고요. 한국기업은 여기다가 무슨 명분으로 돈을 내느냐 그 말입니다. 그 돈의 성격이 뭐냐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자발적으로 저희가……

○**이정현 위원** 자발적 아니잖아요. 정부가 내라고 그랬지 자기들이 언제 자발적으로 돈을 낸다고 그랬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안을 갖고 제안하는 기업들이 몇몇 있었고요. 또 이번 정부 입장의 핵심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어야 되겠지요. 일본기업들이어야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그쪽 대법원도 판결을 냈는데 우리하고 반대 판결을 냈고, 그래서 자기들은 법치국가이고 법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관련해서 민관공동위원회 개최해서 브리핑한 보도자료 보셨지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것?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저희가 그간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모든……

○**이정현 위원** 많은 검토를 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봐 보면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사실상 그쪽에 배상이나 보상이나 이렇게 표시는 안 됐었지만 청구협정 때 그때 와 있었던 돈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정부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1차·2차에 걸쳐서 2007년도에, 말하자면 정부가 배상을 했었던 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하고 달리.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 청구권을 받아 가지고 75년도에도 1차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그때 부상자들은 포함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신고를 안 한 사람들도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그것 말고 전체가 또다시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도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과거에 그런 협정을 맺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런다면 정부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보상을 해 왔던,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고 그 전에 박정희 정권에서도 해 왔고 세차례에 걸쳐서 해 왔었던 그 배상에 대해서도 또 한편으로 어쨌든 발표한 내용대로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게 충돌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뜯금없이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라고 하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생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깊이는 모르지만 일본기업에 대한 것이고 그 일본기업의 협력사라든가 이런 한국기업도 같이 참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추측도 해 보는데 어떤 게 맞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일본에서는 말하자면 이게 8월 말 정도에 현금화돼 가지고, 진짜 현금화되고 이게 실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관방성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에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준비를 시켰다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표현해서 그거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만약에 한국이 이렇게 현금화 시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를 각 부처마다 다 대책을 내 보라,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듯이 아까 장관님께서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우리도 같이 맞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핵심이고요. 여타 기업은 자발적입니다. 그

래서 자발적으로 기여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강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런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대목에서 지금 현재 소송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하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 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부상자들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들도 또 소송을 해 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그때도 계속해서 무한대로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까? 거기 기금, 돈 내놓는 데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의향을 갖고 있지만 소송 케이스가 쌓일수록 자발적인 의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그 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찍이 이런 피해가 현실화됐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 하셨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그 상황 악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외교 당국 간에는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일측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이 계속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마지막 말씀은 국회가 장관님한테 해야 될 말씀을 장관님이 장관님한테 하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오늘 외교부, 통일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오전 중 정양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연철 예,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인사청문보고서 불채택 문제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과의 소통부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이후에 청문회에서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항상 염두에 두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장관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의 지적은 좀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깊이 시정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외통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보다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 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해 주신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 | | | | |
|-----|-----|-----|-----|
| 강석호 | 박병석 | 박주선 | 송영길 |
| 심재권 | 원유철 | 원혜영 | 유기준 |
| 윤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인영 |
| 이정현 | 이해찬 | 정병국 | 정양석 |
| 정진석 | 천정배 | 추미애 | |

○청가 위원(2인)

- | | |
|-----|-----|
| 김무성 | 김부겸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제1차관	조세호
제2차관	이태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공공외교대사	장재복
기획조정실장	유대종
의전장	임기모
재외동포영사실장	이상진
조정기획관	김영완
인사기획관	김필우
원자력·비확산	임상범
외교기획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	강상욱
북미국장	김태진
중남미국장	조영준
유럽국장	정기홍
아프리카중동국장	홍진욱
국제법률국장	유기준
양자경제외교국장	김희상
북핵외교기획단장	정연두
평화외교기획단장	이동렬
외교전략기획관실	문성환
심의관	

통일부

장관	김연철
차관	서호
기획조정실장	이주태
정세분석국장	백태현
인도협력국장	서정배
통일정책협력관	이승신
남북회담본부장	정승훈